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2021년 8월11일~8월14일까지 공사를 진행 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 시작 전 양해 또는 안내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음민원으로 인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3차례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공사현장의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음발생 최소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또는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폭염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좁은 골목 맞은편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여 외부환기 없이 답답하게 생활해야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린 자녀들은 시끄러운 공사소음으로 낮잠을 잘 수 없어 짜증내고 울었다고 하며, 방학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어 집에 있는 학생도 공사소음으로 시끄러워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또한 임신 9개월의 임신부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시공업체)

- 피신청인인 ○○설비건축(대표 ○○○)는 또 다른 피신청인인 ○○구 ○○로 소재 다가구주택 6가구 건물주 ○○○ 님으로부터 “가정 내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이하 ‘공사’라 약칭함)를 도급받은 시공사입니다.
- 본 건 공사는 서울시에서 정수시설에서 고도정수를 거쳐 생산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정 내 노후 수도배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누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수도배관 교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 피신청인은 2021.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에 하루에 1가구에서 3가구씩 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진행 순서 〉

- ① 공사를 위해 가재도구 이동 및 비닐 포장작업
- ② 수도배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작업
- ③ 수도배관 절단 및 설치 매립작업
- ④ 평탄작업 및 미장작업
- ⑤ 가재도구 원위치 및 비닐 철거

- 하루 공사시간은 아침 8시에 도착해서 공사를 위해 가재도구 이동 및 비닐 포장작업에 30분, 터파기 작업 1시간, 수도배관 절단 및 설치 매립작업 1시간, 평탄작업 및 미장작업 1시간, 가재도구 원위치 및 비닐 철거 30분 등 공사시간이 소요되어 오후 4시 30분 정도면 하루일과가 마무리됩니다.
- 신청인이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공사 소음은 전체 공사과정 중 일부공사인 수도배관 부설을 위해 공사장비인 함마드릴, 힐트기리를 이용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략 1가구당 1시간 정도로 전체 공사기간 중 8. 11일에 2가구 공사에 2시간, 8월 12일 3가구 공사에 3시간, 8월 13일 1가구 공사에 1시간 정도씩 공사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 신축공사나 대형시설물 공사처럼 1~2년에 걸친 장기간의 공사에 비하면 공사기간이 극히 짧을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작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피해 보상액 주장은 전례가 없는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본건과 같은 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15년 간 수행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민원은 처음으로 겪는 일인 바, 통상 수도공사와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공사는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므로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인해 왔던 게 관례입니다. 본 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만일, 신청인 17명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비를 이용한 공사기간인 8월 11일~8월 13일은 수, 목, 금요일은 평일인 관계로 직장인, 학생은 직장, 학교 등에 출근하는 것이 통상이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재택근무 등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 17명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 증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으며, 만일 소음 피해가 있더라도 몇 시간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금액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 중 소음 피해에 노출된 정도, 피해시간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건물 소유주)

- 1988년 준공된 건축물로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 상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수도배관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미관을 위한 공사가 아닌 많은 양의 녹물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행한 공사입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용 면적이 아닌 단독주택 내부 공사는 공사 시행에 대한 필수 공지 의무가 없으며, 실내공사 소음 발생시간도 시행자(○○종합설비)의 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듯, 가구별로 1시간 정도로 확인됩니다. 총 6가구이며 공사기간 내 최대 6시간 확인됩니다.

- 현재는 코로나 시대로 일일이 방문하여 사과와 양해를 구할 수 없으며, 그 시점 저희는 코로나 백신을 완료하지도 못했습니다. 방문해서 양해라니요 잊을 수 없는 일이며, 집합금지명령 또한 위반사례가 됩니다. 배달 음식도 집 앞 현관에 놓고 가는데 방문 양해라니 현 시국에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 소음으로 인한 구청에 신고로 공사시간도 지연되었으며, 시행업체에서 소음에 대한 벌금도 부담하며, 항의 및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사지연을 염려하여 벌금납부로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3일 만에 종료 가능한 공사가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 서울시의 역점사업 시행 시 수도사업소에서 가택 방문으로 수도관 점검 시 주변 지역에 공사고지 및 소음에 대해 고지 받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받지 못한 내역에 대한 벌금은 지금도 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1.08.11~2021.08.14일까지 저녁 6시쯤 공사 종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대략 17시까지 근무하였으며, 17시 이전 공사 마무리로 그전에 공사는 종료되었습니다.
- 공사 담당자들의 휴대폰 인입 전화는 기지국 확인불가하고 발신으로만 기지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발신번호로 기지국을 조회하였습니다.
2021.08.14일 12:02 중구 ○○동으로 기지국이 조회됩니다.
- 8.14일 10시경 소음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서류 확인되나, 공사 최종 마무리로 소음발생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마무리 공사 후 바로 종료하였습니다.
- 추가 증빙자료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공사 차량 이동시간 확인을 위한 구청에 방법용 CCTV 조회 가능여부 요청완료)
- 2021.08.11-2021.08.14일까지 신청인 ○○○ 외 16명 소음으로 민원요청 시간인 오전 9:00 부터 18:00시까지 자택에 거주 하고 있었다는 확인 자료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만약 거주 미확인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고소진행도 예정입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다가구주택이 밀집하여 차량으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나 사업장 등의 생활소음원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정온한 환경이다.

나. 신청인 주거 건물 현황

- 위 치 : ○○구 ○○로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440m^2$
- 주 용 도 : 다세대주택, 근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규 모 : 지상5층
- 사용승인 : 2017.11.1.

다. 피신청인 주택 현황

- 위 치 : ○○구 ○○로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98m^2$
- 주 용 도 : 주택
- 구 조 : 연와조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사용승인 : 1988.12.30.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내용

- 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주민의 소음 등의 피해민원이 관할구청(환경과)에 3차례 제기되어 1차례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소음발생 행위의 분산, 저소음 건설기기의 사용 등의 명령 및 과태료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현장 조사내용

○ 신청인 의견

- 수도배관 공사기간 중에 부모님 댁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이웃집에서의 공사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은 동안 구청에 직접 민원제기 및 소음측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다가 금년 11월5일자로 이곳에 전입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 소음피해를 겪은 사실이 있어 추가 배상을 하고자 합니다.

○ 피신청인 의견

- 지금껏 많은 수도공사를 진행했으나, 이와 같이 분쟁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며, 공사시기가 한 여름철이고 해서 창문을 열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관련된 공사이며, 상수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이며, 그동안 녹물 및 소출수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있어 짧은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웃 건물 세대원 전체가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조사결과

-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측이 주장한 공사기간 및 시간 때에 모든 신청인이 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직장인에 대한 재택근무 입증자료를 제시토록 하였음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 피해 평가

-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평가하였다.
- 관할 행정기관(○○구청)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직접 공사장 생활소음 측정자료를 근거로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소음측정 결과

- 측정일시 : 2021. 8.12.(목) 13:40
- 측정지점 : ○○동(신청인 주택), 502호
- 측정결과 : 1차 72.2, 2차 73.7dB(A)[배경소음 55.7dB(A)]

4. 판 단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측정결과 최대 74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최대 9dB(A)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 및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신청인 ○○○ 등 14명에게 배상한다.
- 신청인 중 ○○○, ○○○, ○○○, ○○○ 등 4명은 피신청인의 공사 기간 중 공구류 사용 일에 직장인으로 직접적인 소음피해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배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의 소음피해 기간이 7일 이내이므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0.9.」을 참고하여 1월 배상액의 60%를 적용한다.

- 수도배관 교체공사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 하여도, 노후된 옥내 수도배관 교체공사로 인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공사는 주거생활의 필수적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공사인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사의 성격상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점, 당사자 진술에서 공사 전 사전안내 및 공사 중 사과가 전제되었으면 분쟁으로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진술 및 피신청인 측의 사과의사를 표명한 점, 시공사 측에서 향후 동일 공사 시행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변을 배려하겠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30%를 적용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65,400원, 재정신청 수수료 980원을 추가하여 합계 366,380원이다.
 - 옥내 수도배관 교체공사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 ▶ $145,000\text{원}[3\text{일}\approx 1\text{월 이내}, 6\sim 10\text{dB(A)이하 초과}] \times 60\%$
 $= 87,000\text{원} \times 30\%$
 $= 26,100\text{원} \times 14\text{명}$
 $= 365,400\text{원}$
 - 재정신청 수수료
 - ▶ $26,100\text{원} \times 0.3\%$
 $= 70\text{원} \times 14\text{명}$
 $= 980\text{원}$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